

# 민주,美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친구 잘못 단호히 지적해야”

### “의혹 규명보다 문제 제기 막기만”

### “뺨 때린 가해자 걱정,美 변호사냐”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관련한 대통령실 태도에 대해 “의혹 규명이 아닌 문제 제기를 막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12일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공통 이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땐 모으더라도 친구 잘못을 단호히 지적하는 게 성숙한 동맹”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정부는 의혹을 규명하기 보다는 합리적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실이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 규명 활동과 대통령실 보안 강화 입법 추진을 언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공개된 정보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해명했는데, 뒤집어 말하면 최소한 일부는 맞는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발언을 상기하고 “선의면 동맹국을 대상으로 불법 도청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라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대통령실은 도청을 아무 일 아닌 듯 축소하려고만 한다”며 “도청 당사국이 인정을 하는 걸 봤는가”라고 말했다.

또 “그런데 왜 도청당한 우리가 먼저 나서서 미국과 의견이 일치한다며 감추기에 급급하나”며 “아무리 혈맹이라도 주권국으로서 국가 기밀 도청엔 엄중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안보실이 뚫린 것도 경악할 일이지만, 아무 설명 않고 말로만 완벽하다면서 정치적 공세만 하고 있으니 국민이 더 분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화살을 엉뚱한 곳에 돌리지 말고 이번 사태를 바로 잡으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확실히 확보하는데 온 힘을 쏟으라”고 촉구했다.

최고위원들도 도감청 의혹 관련 우리 정부 태도를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의혹 관련 미국 측 반응을 소개하면서 “뺨 때린 사람은 내가 때렸다 인정하는데 맞는 사람은 내가 언제 맞았냐고 비굴하게 변명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한 술 더 떠 뺨 때린 손을 걱정하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걱정하는 셈”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미국 변호사인가”라고 성토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자해 행위, 국의 침해 행위라며 야당을 비판하지만 정작 안보마저 정점으로 몰아가는 건 대통령실”이라고 주장



했다. 아울러 “도청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야당이 아닌 미국 언론”이라며 “왜 일본 언론, 미국 언론엔 아무 말 못하면서 야당 탓만 하나”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도둑이 제 발 저려야 하는데, 당한 사람이 제 발 저리는 상황”이라며 “(미국 측이) 전면 부인을 못하는 데 왜 우리가 관찮다고 하나”라고 했다.

나아가 “묻고 따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건가”라며 “최소한 자주국, 독립국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해야 할 게 아닌가”라고 규탄했다.

송감석 최고위원은 “한국 국방 장관과 위조란 견해 일치했다는데 미국 국방부는 정작 아무 말이 없다”며 “오하려 보고되는 문서 양식이 맞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 광양시의회, 포스코 지역 상생협력 촉구

광양시의회는 12일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지역과 상생협력하고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일주일만 지난 지금까지도 포스코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광양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한 기업윤리에도 위배되는 이윤배반적인 처사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광양시민들은 생존권, 건강권의 위협을 감내하며 언제나 포스코를 응원해 왔지만, 포스코는 지주사 출범과정에서 광양시를 철저히 배제했으며 일방적으로 정비 자회

사 설립을 추진하는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의회는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광양 시민들의 요구에 응할 때까지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해 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포스코가 ▲광양지역상생협력협의회에 적극 참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일방적인 정비 자회사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지역업체 활용, 지역인재 채용 등의 상생 협력 방안을 실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광양=김현근기자

## 서동욱 의장 ‘농어업용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 지원’ 건의

###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 참석, “농어업인이 처한 현실 직시해야”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광역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무분별한 전기요금 인상 정책을 비판하며 “농사용 전기 도입 취지를 고려해 농어업용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는 10일 대전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3년도 제3차 임시회를 열어 주요 업무 등 현안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전남도의회에서 제출한 ‘농어업 전기요금 제도 개선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32조 6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 적자 만회를 위해 작년과 올해 초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을 감행했다.

서동욱 의장은 “한전이 전기요금을 무작정 상향하다 보니 농사용(갑)은 97%, 산업용(갑)Ⅱ는 32%가 인상되어 농사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책정된 결과가 발생했다”며, “영농·영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도입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비판했다.

서 의장은 “농어업인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즉시 재조정되어야 하며, 급작스런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국비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지위판장이나 어업인 소유 저온보관시설 등은 일반용·산업용 전기료가 부과되어 어업인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농업 분야와 형평성을 맞춰 어업 분야의 농사용 전력대상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와 소관부처, 한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